

벼랑에 선 한일관계 극일의 길은 있는가

김도형 dohkim0110@naver.com

I. 한일갈등의 현주소

II. 한일갈등의 배경

III. 강제징용 판결 의미와 해결방안

IV.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의 파장

V. 인재 쓰나미 대책과 극일

I. 한일 갈등의 현주소

1.1 2010년 이후 한일관계 장기악화 일로

- 2010년부터 한국의 세계시장 쉐어 약진, 일본의 제2위 경제대국 지위 중국에 넘겨준 이래 관계악화(일본의 초조?)
- 2011. 8. 19 MB와 친한적인 일본 민주당 노다총리와 교토회담(위안부와 소녀상철거문제) 파열, 2012. 8. 10 MB 독도방문, 천황사과요구 발언 등으로 관계악화. **일본외무차관의 3점셋트(총리위안부 사죄,주한일본대사 피해자방문위로,정부예산지원)지참방한에도 불구하고 국가사죄요구로 관계개선 기회 일실**
- 2013. 3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 검증, 무라야마 담화 무효화 언급 도발, 3년간 정상외교 단절. 2015. 9. 3 중국의 전승기념일 천안문 열병식전 참석 (2014. 6. 3일 주한한미 사령관 사드 한국배치 요구 공식화 이후 중국측 반발 무마차원?) 중국傾斜에 대한 일본측 불만지속.
- 2015년 12월 위안부합의(화해치유재단설립)하에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정상간 영상대화.
- 2017. 5 문재인 정부 출범. 위안부합의 검증 TF 출범, 화해치유재단 일방적 해산 등으로 관계 악화.**국제관함식 자위대함 욕일기 문제, 사격통제레이더 조사 및 저공비행 사건, 국회의장 천황 전범 거론, 경기도 전범기업 제품 등록 입법 등. 결국 6. 28~29 오오사카 G20 '번개 정상회담' 무산**

1.2 과거사 관련 한일 공수 역전

- 과거 피해자 한국이 도덕적 우위, 공세적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가해자인 일본이 **역공**
 - 일본은 화해치유재단 해산,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등을 **국제법 위반사례로 공세**
 - 한국은 국내경제정치 문제로 좌초, **중장기 대외전략과 대일전략없이 졸속 능력대응에 시종, 과거사의 국제인권적 차원의 프리미엄 상실**
 - 2015.12.28 합의는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총리의 사죄와 반성, 그리고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 등이 명기된 만큼 **일본 정부가 사실상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80%성공**. 피해자 중심적 접근과 소통부재는 약점! TF와 문정권이 주장하는 이면합의(소녀상 이전)는 어불성설
- 과거사문제가 한일관계 전면을 지배, 미래 대화 상실 위기
 - **위안부, 강제징용징병 문제가 한일 관계의 전부인양 인식하는 형국.**
 - 2012년 이전에는 정경분리 원칙아래 정치적 갈등이 경제적 갈등으로 비화되기 전 차단. **양국 정치후견인들의 대화채널 작동**
 - **일본은 상기 2대 현안 해결이 없을 경우 경제협력이 어렵다는 입장.** 이를 정권기반 강화에 활용
- 한국 역시 반일친일 프레임으로 정치기반 강화, '눈에는 눈, 귀에는 귀'

1.3 강제징용 배상 판결! 갈등의 씨앗

- 2005. 2. 28 강제징용피해자 여운택씨 등 4명 新日鐵住金を 상대로 개인 배상 청구 소송제기
- 2012. 5. 24 대법원(제1부, 김능환 대법관주심, '**건국하는심정**') 파기환송
 - 일본재판부의 판결은 우리헌법 취지에 어긋나며 신일철주금은 신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 2013. 7. 10 서울고법, 신일철주금에 1인당 1억엔 배상 판결
 - 2018. 7. 20 서울중앙지검, 강제징용소송관련 의혹수사(**해당소송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전대법원장 개입정황**)
- 2018. 10. 30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원고승소판결, 신일철주금에 피해자 1인당 1억엔 배상 판결. 13년8개월만(1997. 12. 24일 오사카 지법에 소송한 날로부터 21년)에 원고승소
-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내 전문가 찬반
 - 反: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소멸시효, 법인체법리, 기판력** 등을 이유로 부당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7/31/2019073100223.html> 贊: 조국 민정수석 **65년 청구권협정은 불법성 기초한 배상 부정, 이에 반대하면 토착왜구, 친일**
- 신일철주금의 한국내 **자산 압류, 연내 현금화** 시도로 양국 갈등 증폭. 일본정부는 일본기업의 피해를 목전에 두고 각종 대한규제 조치 강구
 - **2019. 7 반도체 관련 핵심부품소재 3개 품목 한일교역사상 유례없는 수출규제!**

1.4 일본의 수출규제로 '65년 체제' 최대 위기

- 2019. 7. 4 3개 반도체 전자제품 소재부품 대한 수출규제와 8월 초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조치로 관계 경색
 - 일본측: 수출금지는 부정, 한국측: 징용공 개인보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 양국 상대를 **경시(Benign Neglect)**에서 **무시(Malign Neglect)**로
 - 한국은 중국 중시-일본 경시, 일본은 미국 중시-중국 관계회복으로 한국을 포기. 일본의 嫌韓, 한국의 反日 대치
 - 한반도 신냉전 전환기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 공유를 부정. 박근혜 정부하에서 일본 정부 외교청서에서 관련 문구 삭제**
- 한중일 3각 구도에서 일중관계 회복으로 한일·한중관계 劣化
 - 중일 양국으로부터 따돌림, 동북아 가교역할 수행도 거의 불가능
 - 남북,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의 미사일 도발 지속, 封南通美 전략 일관, 아베의 조건없는 북일 정상회담 제안(9. 14 가네마루 방북단 평양, 사전조율)
-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에서 남방 3각 구도가 결속 약화
 - 중북좌파의 북의 위장평화노선 지지, 중러의 대북지원강화, 9. 19 남북군사합의서, 한미군사훈련 등 축소 등으로 한미동맹 이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환율조작국, 무역제재 언급 등으로 반미정서 증폭 우려
 - 최근 한일GISOMIA 파기, 일대일로와 신북방남방정책 연계시도 등 한국 스스로 '에치슨 라인' 설정, 미일의 인도태평양전략 동참 의지 불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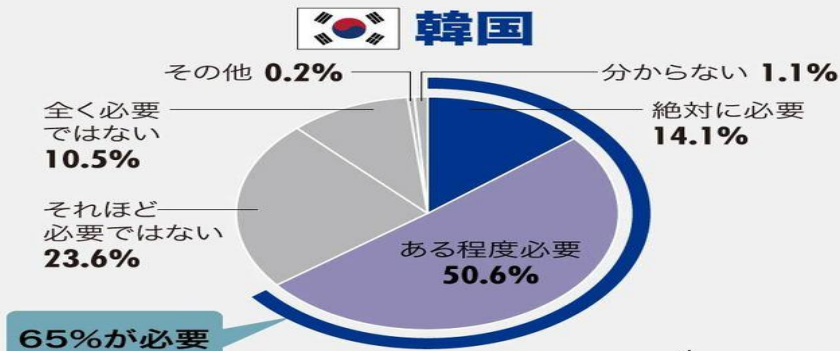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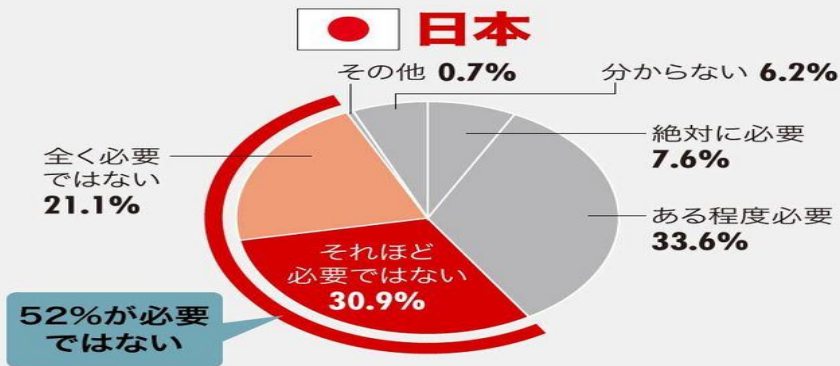
● **일:**한국은 더 이상 필요없다(52%), **한:** 일본이 필요하다(65%)

<필요한 이유>

일: 지리적 근접성, **한:** 경제적 연계성

「必要ではない」が多い日本、
「必要」が多い韓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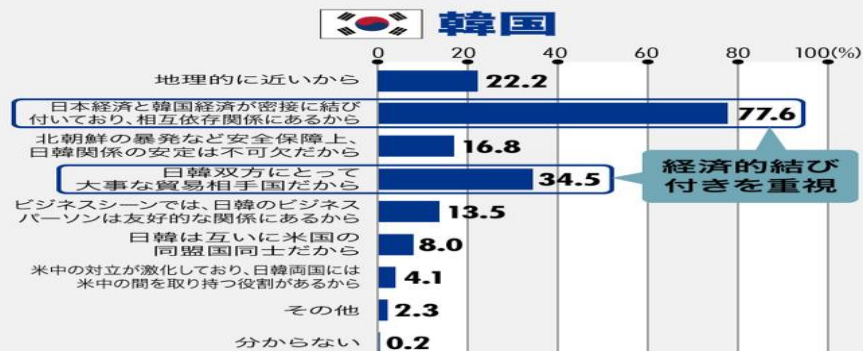
Q1 韓国、あるいは日本は必要な国ですか



DIAMOND

韓国は日本との経済的な
結び付きを重要視している

Q2 前問にて、「絶対に必要」「ある程度必要」と回答した人にお聞きします。
必要な理由は何ですか(二つまで回答可)



DIAMOND

【한일 2000명 앙케이트 조사】

다이아몬드 편집부가 2019年8月 중순 긴급 앙케이트 실시. 조사대상은 일본인 비즈니스 맨 1030명 (연간소득 400만엔 이상) 과 한국인 비즈니스 맨 1030명(연간소득 4050만엔 = 약355만엔 이상). 비즈니스맨에는 회사원 외 경영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무원 포함.

II. 한일 갈등의 배경

2.1. 과거사

- **한일 상호 '짜증과 피로'감 팽배, 서로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인식**
 - 한국: 가해자로서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부재(독일사례 거론)
 - 일본: 가해자보다 피해자 인식여전, 한국의 '골대 옮기기' 비판
- **화해치유재단 일방적 해산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갈등 증폭의 방아쇠**
 - 한국: '**미래팔고 과거와 현재 사려**'는 외교적 무감각과 전략 부재
 - 일본: 아베 1강 체제 아래 **역사수정주의** 만연
- **과거사를 현안 해결방안 제시 없이 8개월 방치, 일본 반격 자초**
 -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동시에 일본에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서 10억 엔 용도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 없음. 무책으로 일관
 - 2018. 10. 28 강제징용 판결 이후 2019. 6. 19 보상방안 '1+1' (양국기업 기금조성에 참여)제시까지 방치
 - 일본정부 정부안에 즉각 반대, 청구권협정에 명시된 중재안 제시. '2+1'(한국정부, 한국기업, 일본기업) 안 2018년11월까지 실현가능성 존재
- **현재 양국 정부 극한 대치: 혐한과 극일**
 - 일본: 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의 틀 안에서 해결 주장(중재위와 국제사법재판소 중재). 이외의 제안 거부
 - 한국: 총리 '3권분립'발언(5.22)에 아베실망, '**일본의 수출규제 철폐와 지소미아 폐지 빅딜**', 일본 거부

2.2. 영토문제(독도)

- 한국은 과거사 문제 중 가장 예민한 정체성 문제. 실효지배 아래 분쟁지역화를 최대한 방지
 - 일본이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사안 인식
 - '독도는 우리땅' 인식제고, 인근경비활동과 국제적 용인을 위한 역사 연구 및 대외활동 강화
- 일본은 2012년 노다 정부 이래 일본의 독도 도발 지속
 - 교과서 게재, 다케시마의 날 행사 격상, 중앙정부 관여 증대 등
 - 독도인근 수역경비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반발
- 최근 중러 군용기의 독도영공 침범으로 국제분쟁지역화 우려
 - KADIZ를 넘어서 독도 위에 있는 한국 소유 영공까지 침범.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 사격.
 - 우리의 정상적인 사격공격 방어에 일본이 항의하는 촌극!
 - 외신은 'Disputed Tokdo/Takeshima Islands, claimed by Japan and South Korea' 로 표기

2.3 중·북에 대한 인식 격차

- 한국: 중국 부상을 거대시장과 현지공장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대북 억제라는 전략적 가치 중시
 - 일본은 경제적 측면도 중시하지만 세계경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중국의 패권우려, 한국의 '중국傾斜론' 을 경계
 - 일본은 미일동맹과 다이나몬드 안보(미·일·호주·인도 Quad) 중시.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한 개도국 지위 부여를 실패로 인식? 중국의 사회주의식 시장경제시스템에 초기 인정과 논리 모순
 - **양국의 대중 인식차를 메울 일상적인 전략대화 주도할 리더십 부재.**
- 한반도 통일과 북한 비핵화 실패 리스크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
 - 한국: 일본은 한반도 통일에 걸림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가치 인정 않음. 일본의 수출규제 장벽을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경제로 충분히 보상 가능하다는 허상을 추구. 지소미아 파기 결정
 - 일본: 북한 비핵화 CVID 중 검증단계 중시, 이에 상응한 코스트 부담용의. 북한 개혁개방 시 한일 공동개발 사업 추진역할 자임.
 - 남북통일이 일본을 포함한 **4강의 경제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설득력 있는 이해를 촉구하는 리더 부재

III. 강제징용 판결의 의미와 해결방안

3.1 강제징용공 대법원 판결

- (1) 일본 식민지배가 불법이므로 강제징용 행위도 불법. 피해자 배상은 당연하다는 법리
- 국교 정상화 교섭 타결 당시 식민지배의 법적 성격 격론
 - 한국은 불법, 일본은 합법. 외교적 타협을 통해 일종의 '異見의 合意 (agreement to disagree)' 채택
 - 식민지배는 '**もはや 無効**'을 '이미 무효', 'already null and void'로 자의적으로 해석. 한국은 1910년 이후 35년간 식민지배 전체를 불법, 일본은 합법이며 65년 시점에서 무효라고 주장, 대신 不當性은 인정
 - 청구권 협정도 일본의 不當性 인정의 연장선상에서 타결. 김-오히라 메모 작성하면서 '**김: 청구권'배상'으로 국회보고, 오히라: 독립축하금으로 경제협력으로 중의원 보고**' 약조
- 2) 그러나 **외교 문제의 사법화로** 인해 1965년의 외교적 타협으로 봉합한 사안을 재론하는 결과
- 법이 아닌 정의의 관점에서 김능환 대법관의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
 - 한국정부의 1965년 협정에 관한 해석·관행에 역행하는 2회의 특별입법에 의한 정부보상(1975년, 2007년)

(2)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게 간주

- 일본은 한일관계 발전의 토대인 '1965년 체제'의 부정으로 해석
 -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4조국(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은 연합국으로서 전승국 배상, 한국과 대만은 식민지 지배국
 - 그러나 한국은 이들과 함께 '포괄적 해결(lump-sum settlement)'대상국으로 처리, 1965년 체제 출범!
 - 식민지지배를 합법화한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파기할 수 있는가? 북일기본조약 혹은 통일 후 '신한일기본조약 협상'시 한일기본조약 업그레이드 가능할 지도?**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기업의 한국내 자산 현금화**시 일본의 강경대응 불가피
 - 결정적 파국 초래, 상호 보복전으로 한일 모두 상호손실
 - 대일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

3.2. 해결방안

- 해결방안은 크게 네 가지(난이도가 낮은 순위)
 - YS포물러, 제3국 중재위 구성, ICJ 공동제소, 기금 방식.
- YS 포물러: 1992년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상규명, 사죄반성, 후세에 제대로 된 교육 요구, 피해자 구제는 정부가 직접 피해자 구제에 나섬으로서 한·일관계와 국면을 극적으로 전환한 계기에서 유래. 중국의 이덕보원(以德報怨)식 배상포기(니시마츠 건설 등 일본기업의 사후 보상) 참조
 - 야당 대표 제안: ① 식민지배 불법강점을 일본이 사죄, 반성, ②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대일 보상금 일체 물질적 요구 영원히 포기, ③ 모든 식민지배와 연관된 피해자 구제문제는 한국정부의 책임 하에 수행. 물질배상 요구 포기, 정신적인 역사청산을 요구, 도덕적 우위에 선 대일 외교 제안.
 - 7. 18 청와대에서 한국당 황대표도 동의, 대통령에 제안(先정부보상 後 일본기업에 구상권 청구). 문 대통령은 피해자 설득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
 - 국회동의 후 정부특별입법 가능. 2005년 노무현정권시 민관합동위 권고아래 7만명 보상사례(민정수석 문재인, 개인청구권 주장)
 - 일: 식민지배 사과와 반성에 이은 불법성 인정은 기본조약 폐기 의미, 한: 일본기업보상이 없을 경우 국민적 반대 직면. “식민지배 불법성에 대한 일본중의원결의” 와 물질적 요구 포기간의 딜에 관한 물밑 협상이 관건

● 기금방식(1+1, 2+1, 2+ α : α :일본기업 자발적 기여)

- 한일기업, 한국기업과 정부와 일본기업,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자발적 기여 등 세가지 중 어느 것에 의한 기금조성. 단 **피해자 규모나 피해액, 분담액** 확정이 문제. 반면 위안부 피해자는 정부 공인 268명에 한정.
- 징용피해자는 정부 통계에 따르면 21만명, 역사학자들은 100만명. 노무현 정부 때 특별입법을 통해 보상받은 피해자 7만2000명, 신청자 14만명. 또한 재판 계류자 1000명 전후. **본인에 한정 혹은 유가족 포함 여부와 소송 시효도 정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
- 재판승소자에만 한일기업이 보상, 그 외는 한국정부 보상안도 검토
- 기업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배임가능성**.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같은 내용에 대해 기각. 한국내 일본 지사가 대법원 판결을 따른다 해도 오너, 주주 입장에서 결정은 곤란.

● 법적방식:제3국 중재위, ICJ(국제사법재판소) 위임

- 외교적 협상과 대화 실패를 대내외적으로 공인하는 결과. 동시에 제3자 결정을 정부는 물론 정작 **피해 당사자들의 최종 수용여부** 문제.
- 식민지 지배 합법과 개인보상 법리 우선으로 불리. 그러나 승소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양국간 쟁점이 발생할 때마다 **제3자 위임이라는 선례**를 만들 우려.

- 상기안 중 중재위, ICJ 안 찬성. 단 일본의 수출규제, 백색국가 제외 철회 등 전제없이 수용해야.
-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일본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알리고 국가보상이 개인보상을 소멸시킬 수 없음을 호소하는 기회로 활용.
- 중재위 혹은 ICJ 제소 실패 결과는 겸허히 수용. 이후에는 YS 포물리 중 **식민지배 불법성**을 제외한 대일보상과 배상 등 일체의 물질적 요구는 포기하고 피해자 및 그 유가족 구제는 정부 혹은 국민성금으로 수행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어느 경우이든 피해자 그룹과의 사전조율과 초당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최고지도자 결단. 사법부 판결은 어디까지나 주권의 범위 내에 미칠 뿐. 게다가 외교 국방 등의 문제에 관한 한 정부 입장과 다를 경우에는 '**사법자제원칙(principle of judicial self-restraint)**'을 수용, 행정부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국제법 운용관례.
- 최고 통치자는 법리와 인권보호에 충실한 변호사이기 이전에 사법과 행정 상호간 간극을 메워가는 국가수반의 소임에 철저. **국제조약과 협정 준수와 사법부 판결 동의는 별개.**
- 상기 해결안을 둘러싼 물밑협상과 실무급 협의 진행을 위해 일본기업 국내자산 현금화 조치를 일시 동결 하는 **Stand Still 협정** 필수

IV.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파장

4.1. 일본 수출규제는 동아시아 글로벌체인 훼손 행위

1) 소재 3품목 수출규제와 백색국가제외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의 수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7. 4일)

- 3년 허가에서 개별계약 건별 허가(1000 여 품목 대상)
- 1300개 자율준수프로그램(CP)기업은 특별일반 포괄허가 가능

- 한국을 기존 포괄허가 대상 백색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정령 개정 절차 개시
- 8.2 정령 개정안 내각 통과
- 8.7 시행령 발표, 8.28 시행 예정
- 향후 통제를 위한 기제로서 일종의 “수도꼭지”(결정적 피해를 입힐 100개 품목 준비!)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 불소처리를 통해 열 안정성 등을 강화한 필름
-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다양한 P층 하나
-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 90%

영향 폴더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패키징, 전자차 경량화 소재, 3D프린팅 소재



포토레지스트

-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액 재료
-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 90% (올해 1~5월 기준, 한국의 일본산 수입비율은 91.9%)

영향 반도체기판 포토마스크 제작

※7월 1일 규제 발표 후 8월 7일 첫 한국 수출 허가



에칭가스

-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
-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 70% (한국의 일본산 수입비율은 95% 이상)

영향 반도체 제작 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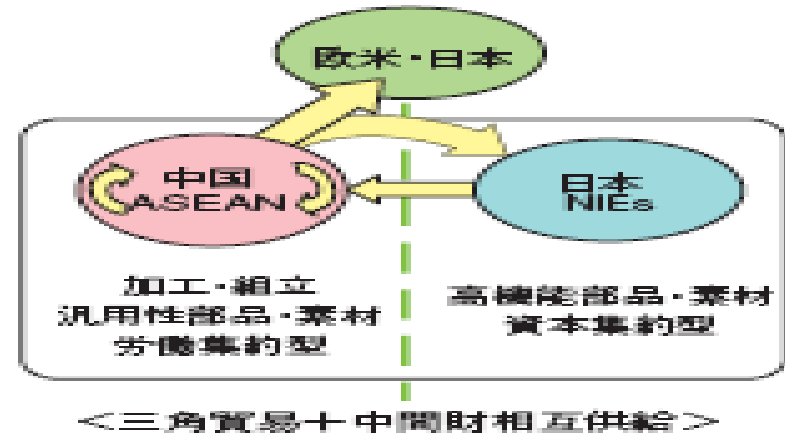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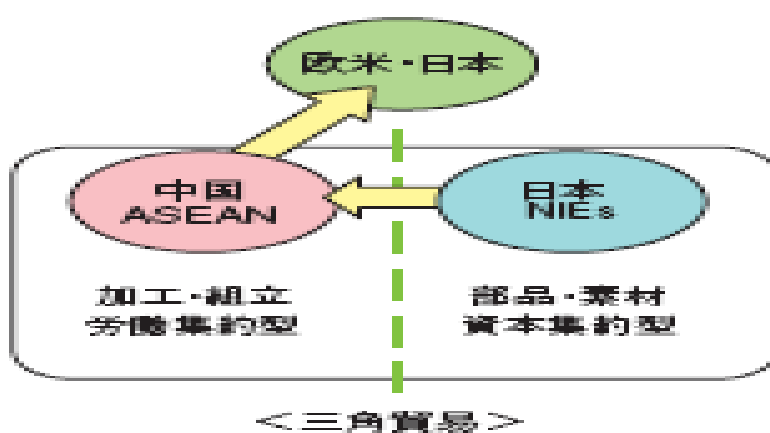
2) 한국은 2004년 포괄허가제를 인정받는 27개국 백색리스트에 포함. 아시아에서는 유일

- 백색리스트에서 제외되면 1115개의 전략물자가 개별허가 대상.일본의 소재·부품·장치('소부장')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 전반에 심대한 생산차질 피해 초래
- 일본 우익인사들과 경제통상관료들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거론함으로써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통제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자재공급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일본의 주문생산에 의존하는 자국의 **해외 파운드리 제품 생산투자 및 해외역수입에도 지장** 초래
- 뿐만 아니라 **일본(고급소재부품)-한국(중간재 생산)-중국(최종재 생산)-구미와 한중일ASEAN 수출의 동아시아 Supply Chain 고도화에 역행, 글로벌 생태계 훼손**
- 미국시장과 자유무역질서 하에 번영을 구가해온 일본 스스로 자유무역통상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 자행
- 백해 무익한 자해 행위의 본심은?

한중일 중간재 상호공급

-동아시아 Supply Chain 고도화-

- 90년대 **3각 무역구조**: 일본(자본집약형 부품소재) → 한국 등 NIES(노동집약형 가공조립) → 최종재의 구미일 수출 구조.
- 2000년대 **3각 무역구조 + 중간재 상호공급**: 일본(기술집약형 고기능부품소재) → 한국 등 NIES(자본집약형 부품소재) → 중국·ASEAN(노동집약형 범용성 부품소재) → 최종재의 구미일·한국 등 NIES 수출. EU(제품분업권)이상으로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



(資料) 経済産業省作成。

3) 한국은 중간재와 자본재 국산화→수입대체→수출대체의 계기적 발전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밀접히 연계, 쇼크의 파급효과도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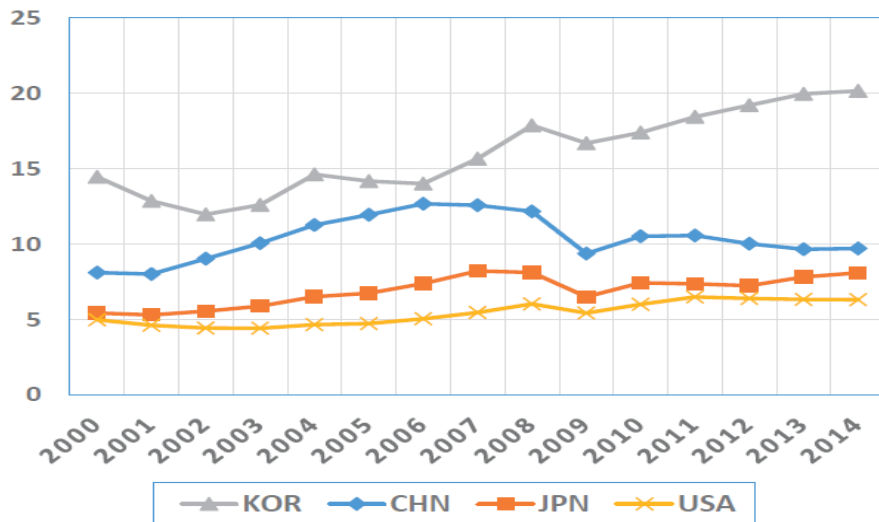
- 소비재 보다 중간재와 자본재에서 경쟁력 확보, 무역수지 흑자 달성

< 가공 단계 별 무역부문 대 세계 경쟁력(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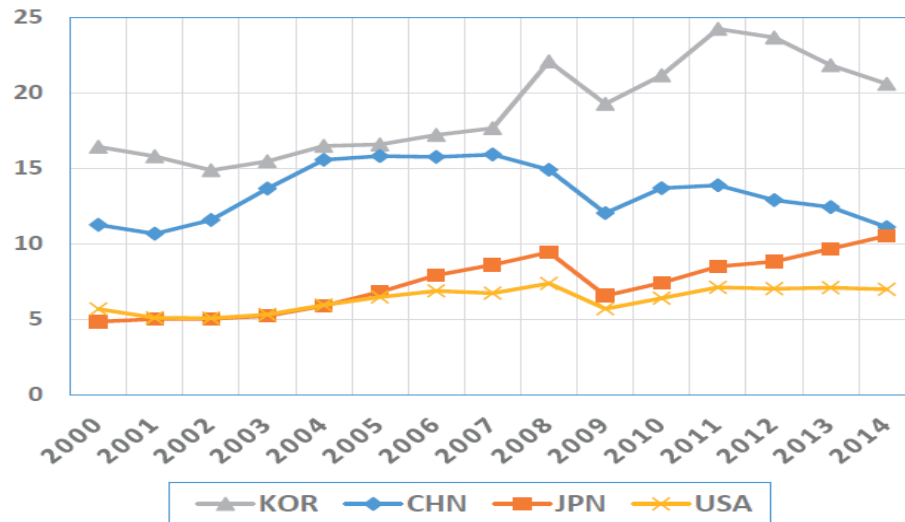
	1차 상품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	기타	전체
무역수지	-127,409	-3,452	26,710	174,246	-438	69,657
특화지수	-0.964	-0.026	0.148	0.253	-0.095	0.061

- 전방GVC 참여도(총생산 중 해외생산에 중간 투입된 국내부가가치 비중)와 후방 GVC참여도(국내 생산에 중간 투입된 해외 부가가치 비중) 동시에 매우 높음.

<전방 GVC 참여도>



< 후방 GVC참여도>



4) 예상을 뛰어넘는 안보차원의 전략물자 규제

-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한 신뢰기반이 의심되어 **수출관리 강화**라는 의아스럽고도 모호한 논리 전개
- 국내에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의 **제3국 중재위 안에 대한 압력 차원의 경제제재 혹은 대한 경제보복**이라는 인식 지배적.
- 그러나 일본정부는 한국 **산업자원부 소관 전략물자 관리 위법사례** 제시, 3개 전략물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적성국가로 부품소재 수출 우려 공식화.**
- 일본인들 '가스 사용 생물병기 테러'에 특히 민감. 1995년 3월 옴진 리교 아사하라 교주 일당에 의한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13명 사망, 부상자 6300명 발생. 2014년 아사하라 사형 집행)과 북한 김정남 독살과 연계
- 아베정부 7. 21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보수결집 전략의 일환?
- 그 직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기업의 대응**을 점검하고 **WTO 제소**를 내비치며 해당 '소부장'의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등 효과도 매우 불확실한 소극적 대응에 급급.

사린 가스 살포로부터 24년-風化되지 않은 기억

김정남 독극물 살해 사건을 연상

- 1995年 3月20日 오전 8시경, 東京 都内 帝都高速度交通営団 (現 東京 메트로), 마루노우치선, 히비야선 각각 2편성, 치요다선 1편성, 도합 5개편성 지하철내에서 화학병기로 사용된 **신경가스 사린 살포, 승객역무원 13명 사망, 부상자 약 6,300명 발생.**
- 사건 이틀 후 경시청은 **옴진리교** 강제수사에 착수, 사건 관여가 판명난 교단 간부급 신자 체포, 林郁夫자백으로 진상 밝히고 5月16日 교단교주 아사하라(麻原彰晃)를 주모자로 체포. 사건관련 체포자 총 40명. 2014년 아사하라 사형 집행
- **2017년 김정남 독극물 살해 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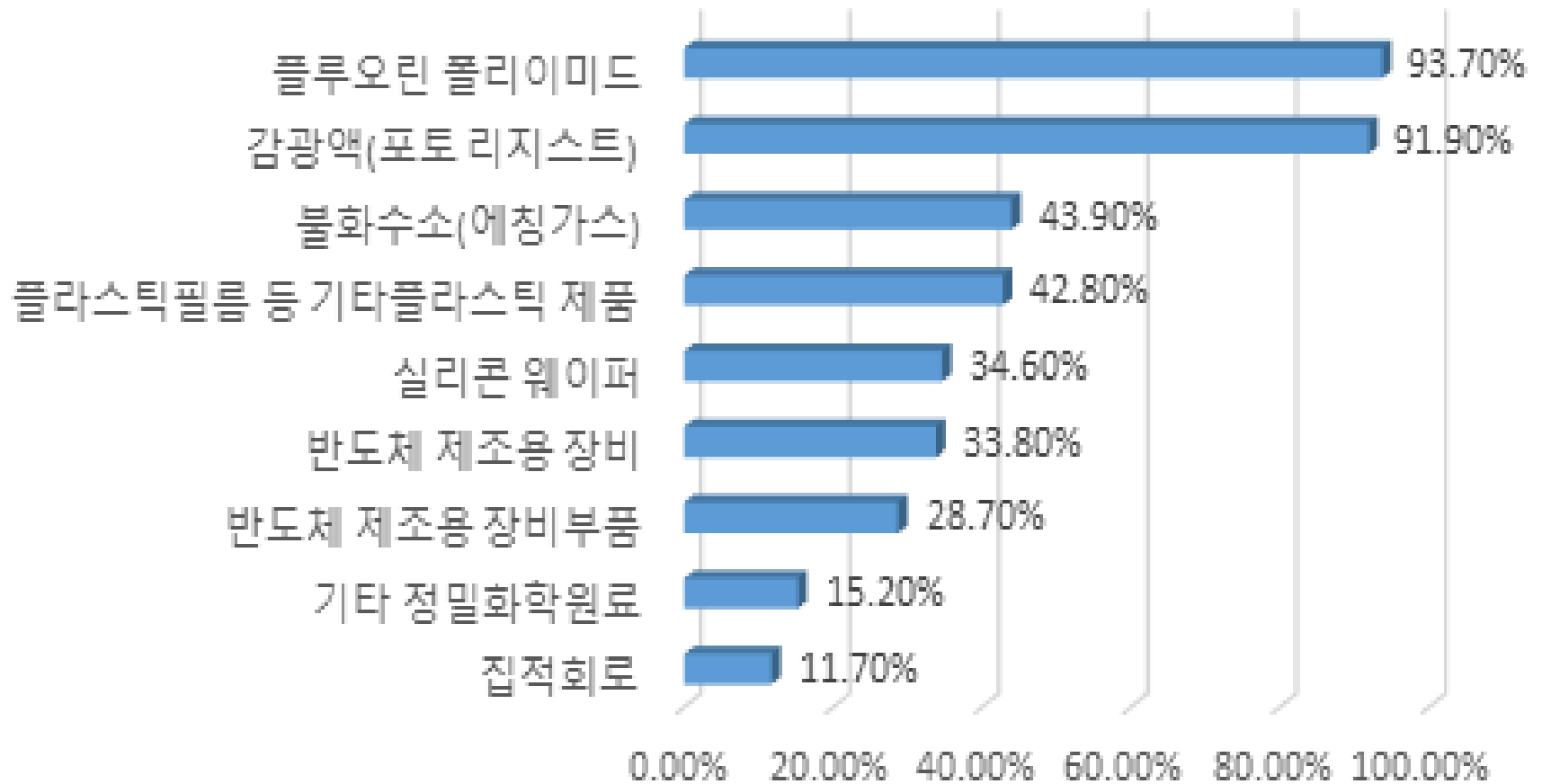
- 일본정부가 자국기업에도 피해를 줄 수출규제를 발동한 배후는?
- ① 반도체 강국 대표적 기업 견제, ② 한국 중간재를 수입하는 화웨이 등 대중·대북 제재라고 하는 이른바 미국과의 공조체제 동참, ③ 강제징용자 피해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제3국 중재위안 수용에 압력 행사 등 다목적 전략적 의도
- 그러나 규제의 직접적인 명분은 소재의 행선지가 모호하며 북한유출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안보상 이유. 경제보복은 아니며 자국의 엄연한 권리인 엄정한 수출관리 차원임을 강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대응도 경제제재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 필요
- 2016. 1~ 2019. 3월까지 우리정부의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현황」자료에 의하면 행정처분(적발)된 대량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사례는 142건, 이 중 68건이 생물화학(BC)병기 관련 물자. 더욱이 부정수출 대상기업의 형사사건 대상여부와 개별기업명도 불명, 처벌과 처분 운용이 솜방망이 식이라 부정수출이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닌지.

- 이들 전략물자는 북한과 우호관계에 있는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으로 유통 의혹 제기되어 옴. **BC 병기는 핵병기에 비해 재료입수, 제조 용이, 살상효과가 일정시간 지속되므로 병사나 시민 위축 효과 큼.**
- 특히 BC 병기관련은 **VX(有機燐系 치사성 신경가스:김정남 독살 가스)**의 원료인 디이소프로피라민(Diisopropylamine), 사린 가스의 원료인 불소화나토륨(sodium fluoride), 청산가스원료인 청산화나토륨(sodium cyanide), 바이러스 병기연구에 이용하는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등의 물질이 여기에 해당.
- 그 외 **BC 병기 연구제조에 전용 가능한 열교환기, 원심분리기, 가열관, 밸브 등 광범한 물질도 포함.**

5) 일본 소재 5천억원이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주력제품 수출 170조원 볼모로 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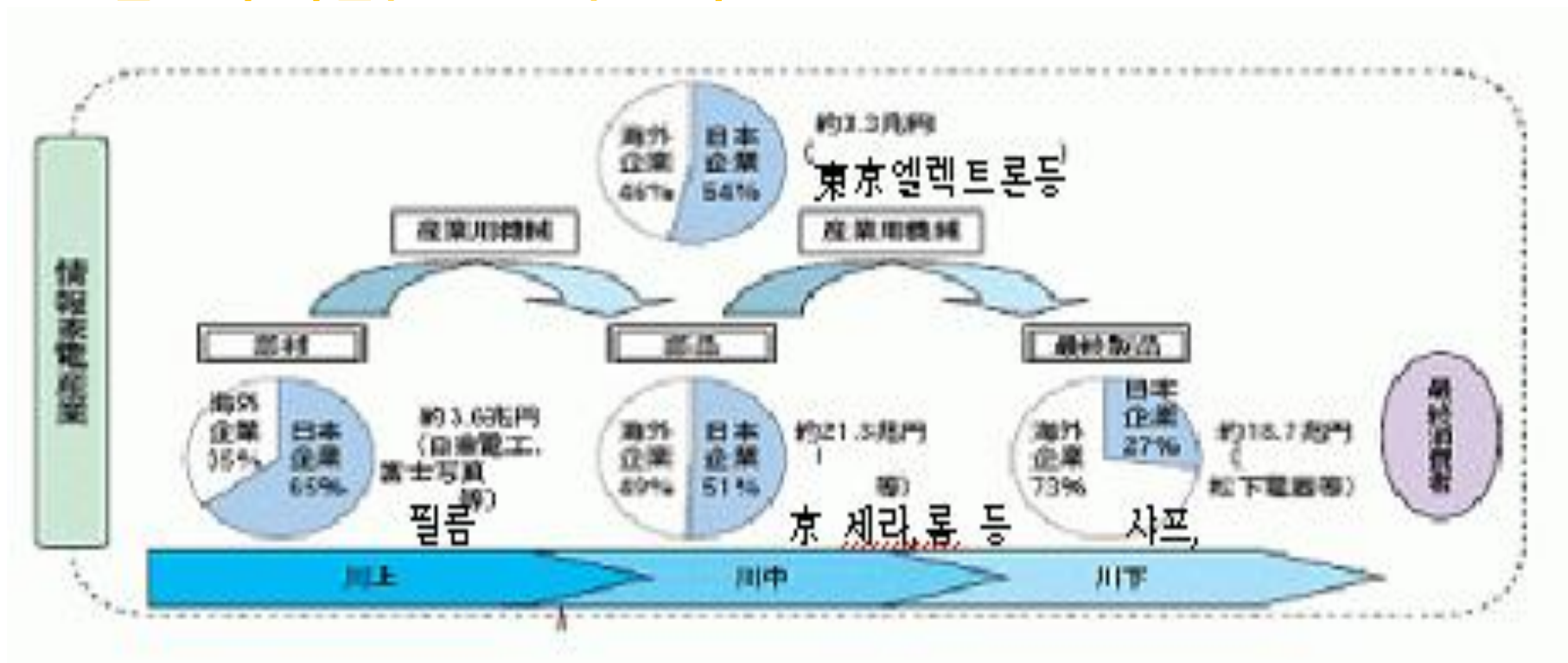
-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는 수백 종. 생산업체에 따라 미세하게 성능이 달라지고 동일품목이라도 브랜드마다 요구되는 화학물질 상이. 다시 말하자면 **화학물질을 변경할 때마다 전체 공정의 미세조정 필수.**
- 포토 레지스트는 전 세계 90%를 일본 기업이 독점생산.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세계 최고 수준의 공정에 쓸 만한 고순도 포토 레지스트 생산 불가.** 화학물질을 다루는 소재개발은 오랜 노하우의 결정체, **국산화에도 막대한 자금과 시간소요.**
- 일본은 100년 넘게 정밀화학 소재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 유지. 특히 **화학물질 생산의 경우 다양한 재료의 혼합비율과 미세조정 여부가 경쟁력의 관건.**
- **히든 챔피언(장인정신+내부혁신+노사협조)** 다수 포진
- 제품자체가 온도 차이에 너무나 민감하여 수송 중에도 전혀 다른 물질로 변질 우려.
- **'소부장'** 공정기술 특성 탓에 우리 기업들의 **대일 의존체제 지속(대일수입의 68%가 소부장).**

반도체관련 대일수입 의존도



일본의 부품소재(部財)산업집적에 의한 첨단제품개발력

- Up-stream(원재료·부재)~Middle-stream(부품)~Down-stream(최종제품)에 **세계적 독과점 중견기업(히든챔피언) 존재**
- 경쟁력의 원천: 공정내부에 **장기안정적 상호의존적 거래관계-일본적 계열(Keiretsu)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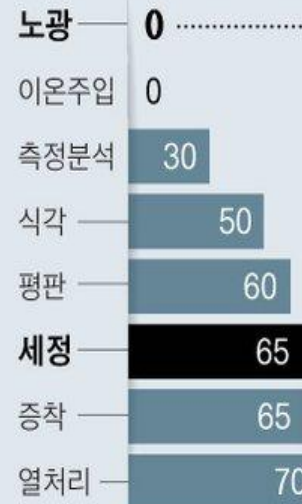
- **수출규제의 직접 영향:** 한국 기업에도 큰 충격, 동시에 **일본 기업은 물론 구미 기업에도 상당한 피해 예상.**
-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D램 반도체와 낸드플래시 메모리, LG와 삼성디스플레이: 대형 TV OLED 와 스마트폰용 중소형OLED ➡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후지쯔, 샤프 등 일본과 구미기업에 납품.
- 여기에 필요한 핵심소재는 스미토모, 스텔라, 모리타, 新越, TOK, JSR 등 일본 기업 제공 중. **결국 수입총액 5천억원 수준의 일본의 3개 소재가 전세계 수출총액 170조원의 한국 주력 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볼모로 잡은 것.**
- 일본이 반도체 소재와 장비를 수출규제하면 대만 이외는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 그만큼 **반도체 소재-부품-중간재의 동아시아생태계 손상 불가피.** 일본이 그 동안 한국에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우대조치를 취한 이유.
- **추가제재 예상품목(첨단소재 전자 통신 고급기계류, 센서 등)수가 1100여개.** 국내제조업에 미칠 영향 예측불허! **'한줌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상전문가의 발언에 경악!
- **반도체 소재국산화율 전공정갈수록 낮아(기업규모 작고 기초기술력 낮고 ---) 대일의존은 구조적.**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1조원투자는 **'언발에 오줌'**

국내소재기업, 덩치 작고, 기초기술 부실, 국산화율도 낮아

- **초라한 국산화율:소재 50%, 장비 18%.** 반도체 제조경쟁력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D램이나 낸드플래시 초미세 공정에 필요한 첨단소재와 장비 국산화율 前工程 갈수록 낮아
- **화학·금속공학 등 기초기술력 부실.** 반도체강국의 역사 10년에 불과, 응용기술에만 치중
- **소재기업 규모적고, R&D 절대액 대일격차 확대.** 일본은 오래전 저부가가치 기술은 한국 이전, 고가로 구조전환. 회로 폭이 14nm 이하 반도체용 포토 레지스트는 일본 스미토모, 신에츠, JSR 등 3사 독점체제 구축
- **정부국산화 정책 일관성 결여,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견기업간 협업체제 미흡**

반도체 주요 공정별 부품 국산화율

단위: %



※이온주입 : 반도체에 불순물(이온)을 침투시켜 소자의 특성을 만드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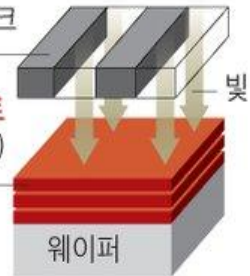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일본 수출규제 소재

노광단계 (빛으로 회로 입히는 공정)

포토리지스트 PR·감광제

포토마스크

포토리지스트
(여러 층 바름)



세정단계 (불순물 제거)

에칭가스 HF·고순도불화수소

에칭가스



6) 양국 과잉개입이 불러올 정책실패, 소비자와 납세대중으로 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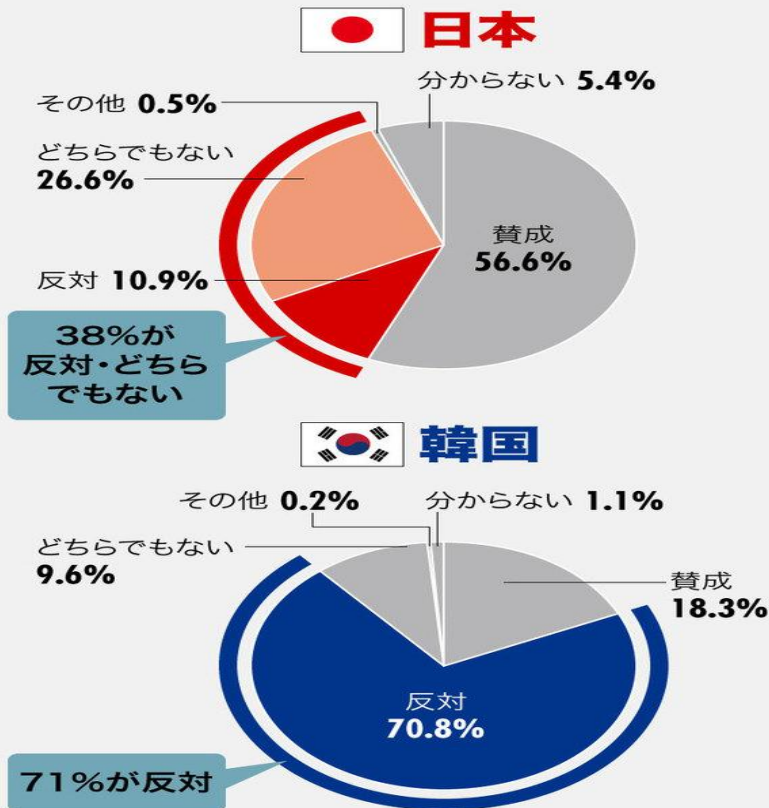
- 일본은 수출규제와 화이트국가 제외 조치를 안보관련 수출관리 차원으로 단순화시키려는 졸속 처방. **한국 역시 지소미아 폐기 등 경제외 어젠더로 불을 끄려는 땀질 처방.**
- **상대국에 미칠 영향은 과대평가, 자신에 돌아올 부메랑은 과소평가.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 소비자가 정부 의도대로 움직여 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책실패 전형.**
- ① 일본은 수출규제로 인해 한국 수입업체 영향 과대 평가. 일본의 수출기업 역시 주요한 고객을 상실할 것에 대비하여 중국현지진출 기업의 생산확대로 대응, 한국기업의 직접 피해 예상보다 적음. **규제우회 전략!**
- ② 일제불매운동, 일본관광과 직항편 축소, 지자체 문화행사취소, **5개지자체의 일전범기업 불매조례안 통과** 등에 따른 일본측 피해 확대, 일본내 보수단합이 참의원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별무 등 **사태진전은 사전예측을 빗나감.**
- ③ 가해기업 미스비시 중공업, 신일본스미토모, 후지코시와 3개 핵심부품 소재 생산 수출 기업과의 연관관계 규명 용이하지 않음. 100년기업 신에츠(新越)가 강제징용 관련 기업그룹인가? **일본기업이 정부규제에 반발** 하는 이유.
- ④ 3개 부품소재의 대 삼성 SK 하이닉스, LG 수출 축소와 동시에 이들 조립제품의 대일 및 대세계 수출이 축소될 경우 발생할 **소비자와 중간생산자의 손실은 누가 보상할 것** 인가. WTO가 인정하는 SG(산업피해구제제도) 등 **기존 무역구제(trade remedies)로도 손 쓸 수 없는 신종의 산업피해 발생.**
- ⑤ 미국의 화웨이 규제 동참, 한국반도체 규제를 통한 자국 반도체 업체 비교우위 강화, 대중기술유출 차단 등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면 3대 핵심부품소재 대한 수출-한국의 중간재 조립생산-대중 중간재와 기술수출에 이르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모 파악 정부는 역부족**
- ⑥ 일본의 핵심부품소재는 전략무기가 아닌 교역파트너의 공유자산. 한국의 유사한 대항 조치 역시 **자유무역과 공정경쟁 질서에 배치.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 제외!**

<대한수출규제강화>: 일 찬성 38%, 한 반대 71%

<찬성이유>: 일 역사문제와 혼동, 한, 역사문제와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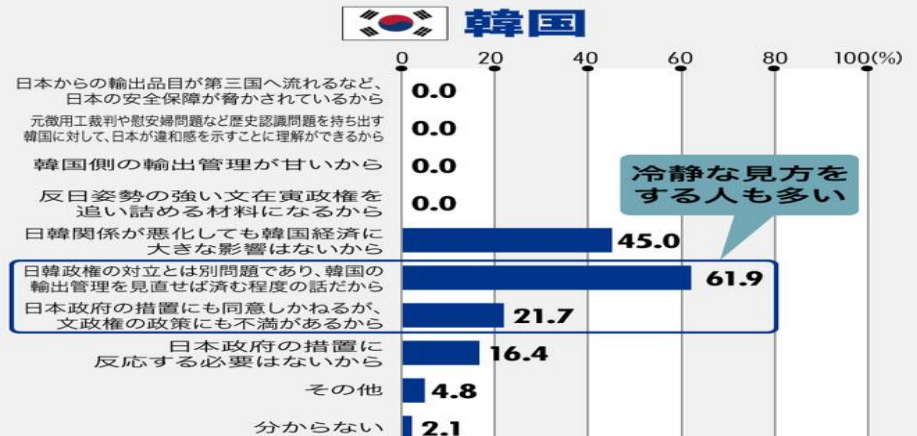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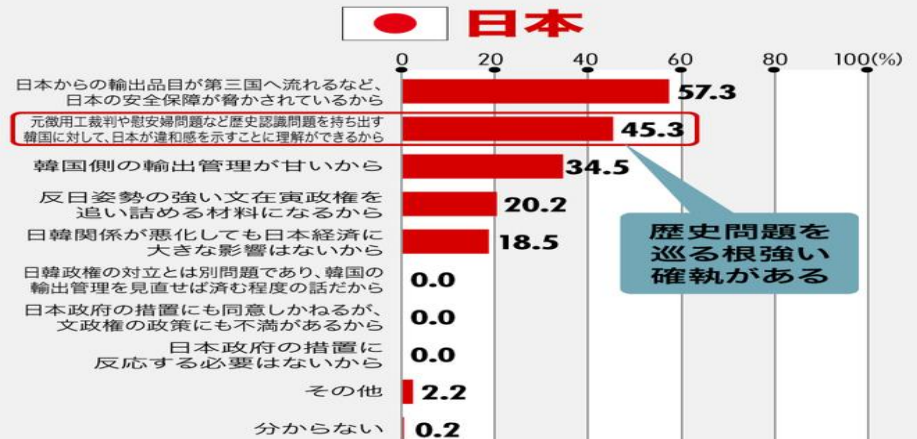
「反対・どちらでもない」の日本人が4割

Q3 日本による「韓国に対する輸出管理の強化」(韓国が日本から輸入するときの規制強化)に賛成ですか(単一回答)



政治と経済を分けて考える韓国、混同する日本

Q4 輸出規制に賛成と答えた方にお聞きします。賛成の理由はどれですか(二つまで回答可)



<수출규제 반대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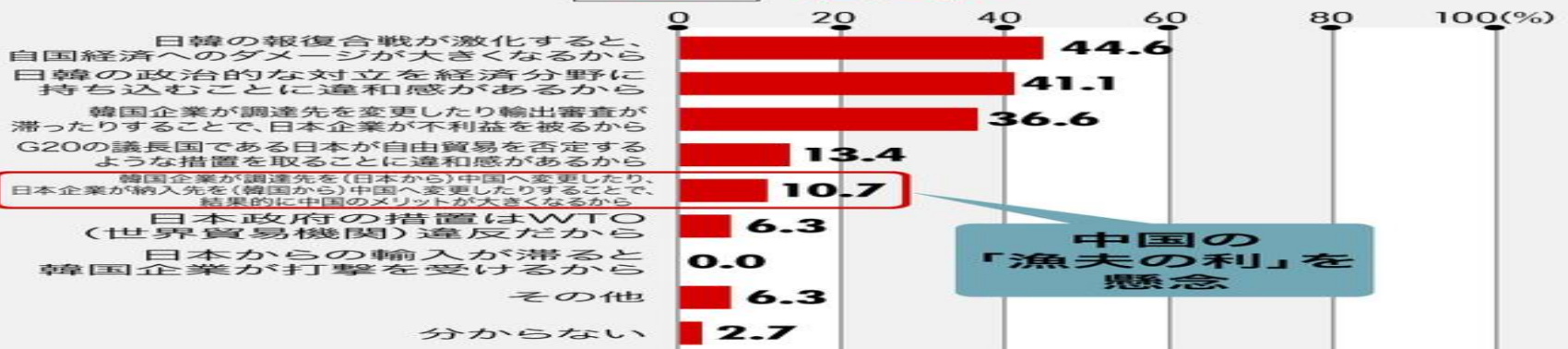
일:보복전으로 자국경제 피해, 경제의 정치화, 수입선다변화로 일본기업 피해, **중국**의 漁父之利(10.7%)

한:WTO 위배, 경제의 정치화, 보복전으로 자국경제 피해, **중국**의 漁父之利(8.9%)

少数派ながら日韓共に 中国の「漁夫の利」を懸念する声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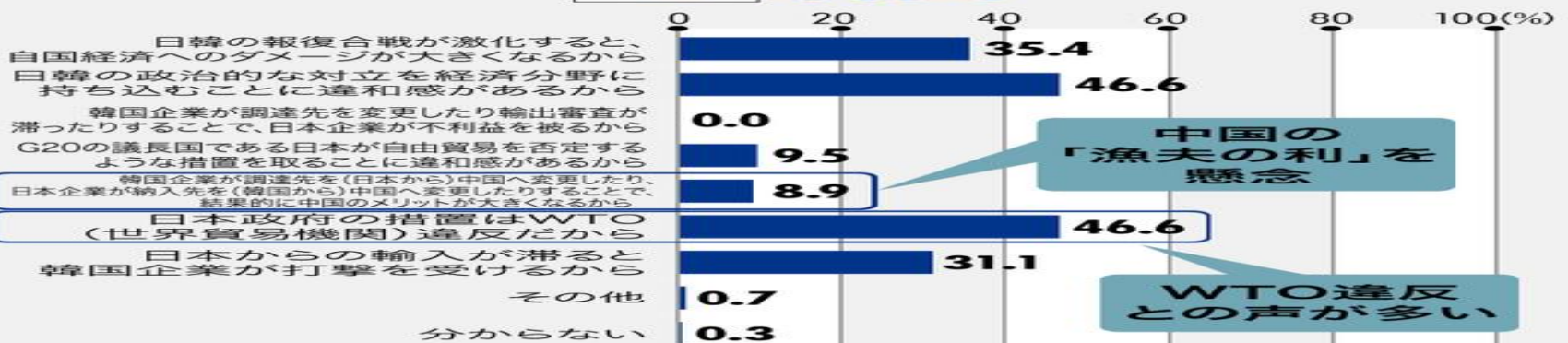
Q5 輸出規制に反対と答えた方にお聞きします。
反対の理由は何ですか(二つまで回答可)

日本



中国の
「漁夫の利」を
懸念

韓国



中国の
「漁夫の利」を
懸念

WTO違反
との声が多い

IV. 人災 쓰나미 대책과 克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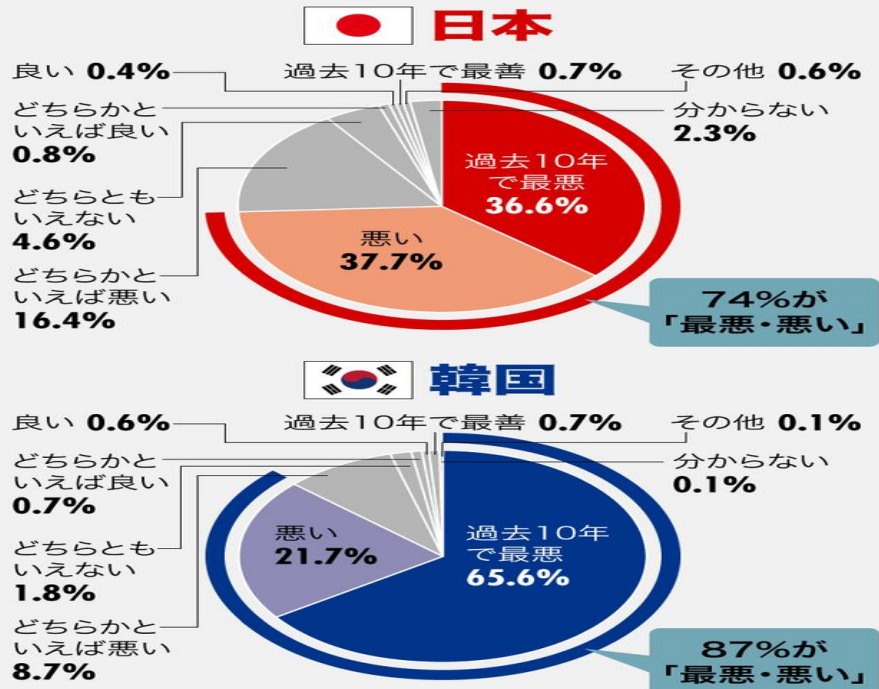
한일관계: 현재와 미래

<지난 10년 중(최악+ 나쁘다)>

일 74%, 한 87%

韓国の方が「最悪・悪い」と感じている

Q8 過去10年のうちで現在の日韓関係はどのような状況にあると思いますか(単一回答)



DIAM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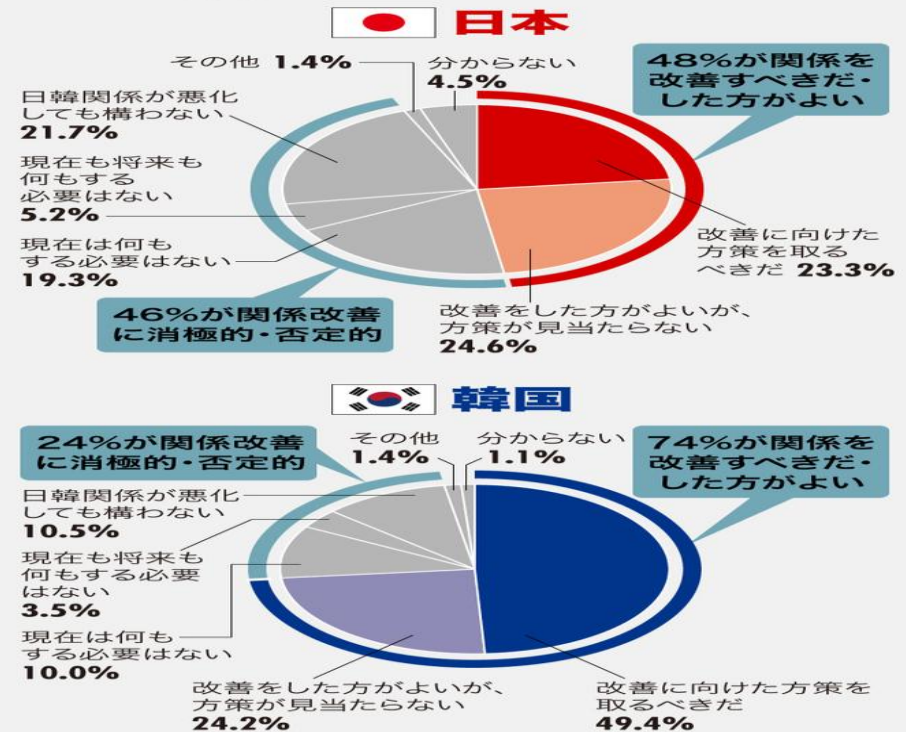
<관계개선>

일: 48% 적극적, 46% 소극적 부정적

한: 74% 적극적, 24% 소극적 부정적

日本のビジネスパーソンの方が冷静さを失っている

Q9 冷え込む日韓関係にどう対処すべきですか(単一回答)



DIAMOND

- 작금의 한일관계 사상 최악. 한마디로 아베의 외교노선은 민주주의 일탈이지만 한국정부의 위안부합의 형해화, 강제징용판결에 대한 행정부의 무책으로 **일본의 안보논리로 포장한 경제보복 자초.**
- 2016~17 **일본외교청서**는 한국을 '전략적으로 협력할 나라, '자유민주의와 시장경제시스템을 공유한 나라' 표현삭제, 2018년 **방위정책대강**에서 안보 협력 국가 순위를 미국, 호주, 인도, 동남아 다음에 한국. 한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평가절하**
- 일본동북지방 대지진 쓰나미 피해도 일정기간 지나면 복원되고 때로는 경제부양효과마저 가능. 그러나 양국리더 공히 BH, 官邸주도의 독선과 오만, 무능과 무책의 **人災쓰나미**는 양국을 강타, 현재로서는 **관계 복원 至難.**
- 최근 WTO 조사보고에 따르면 미중, 한중, 한일 상호제재 등 글로벌 무역 분쟁 장기화되면 **2022년 한국의 실질GDP는 3.34% 감소.** ASEAN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폭이 크며 중, 미, 일도 GDP가 2~3% 감소.
- '**가보지 않은 길로**' 들어서 하향국면이 명확한 마당에 한국경제의 일본형 20년 장기정체(Japanization of Korean Economy) 진입 가속화 조짐.
- **2020 예산 '극일예산'**(피해업종 소재·부품·장비 R&D 지원 8천억원에서 총 2조 1000억원, 162%증액 배정)으로 극일? 소주성 선심성 고용복지예산에 발목 잡힐 우려

● 한일관계 최악의 위기 극복의 원칙

- ① 정치 안보 역사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우선, ②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딜의 대상이 아님, ③ 양국기업의 글로벌 활동 왜곡 최소화, ④ 시민사회 활동 저해와 현세대 부담 차세대 전가 없도록!

● 대일정책 근본에서 다시 짜야-6개 대책 제안

(1) 전략물자 수출관리체제 재점검, 대북제재 공조체제 동참

- 일본의 수출규제 주장의 근거를 원천 봉쇄. '캐치 올 규제(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 수출의 경우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도 '일본보다 더 강하다'는 식으로 뺄대지 말라. 불화수소 40톤 행방(?) 해명, 전문인력 확충을 포함한 중장기 수출관리체제 정비계획 제시. **지소미아 연장으로 한미일 안보체제 강화 !**

(2) 제3국 중재위안 수용, 배상·보상 포기과 피해자 국내 구제

- 전제없이 '제3국 중재위 구성' 수용. 실패하면 식민지 지배 불법성 인정하에 **징용피해자 정부가 배상**. 이후 자발적 보상은 일본기업에 일임. 사법부 결정에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법리논쟁은 더 이상 답이 아님. 대통령은 **민주변호사 이전에 국가수반!**
- 국제사회에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알리고 국가보상이 개인보상을 소멸시킬 수 없음을 호소하는 기회로 활용

(3) 치밀한 논거와 실증으로 WTO제소

● 9.11 WTO 제소 근거 3가지

- ① WTO의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회원국 간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 ② 수출량 할당 등 수출 제한 금지규정 위반
- ③ 무역 규정 공정 운영 의무 해태
 - 최종 결론까지 통상 3~4년 소요, 상소기구 식물화 상태에서 실효성에 의문
 - 일본의 맞 소송에 대응
- 백색국가 제외 관련 국내산업과 소비자 피해조사 결과에 근거한 산업피해구제 제도 발동 검토
 - 한국, 화이트국가서 일본제외 개정안 시행(9.18). 1138개 전략물자 개별허가 대상. 맞대응은 명분약하고 중소기업 수출에 악영향 우려

일본 수출 규제와 WTO 제소까지

7월 1일 일본, 반도체 등 3대 핵심 소재 수출 제한 발표(4일 시행)

8월 2일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각의 결정(28일 발효)

8월 14일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배제 행정예고(다음 주 시행)

9월 11일 한국 “WTO에 일본 제소” 발표

향후 일정 WTO와 일본에 ‘양자 협의’ 요청

합의 실패 시

WTO 패널 설치 요청 및 심리 약 15개월 예상

상소 시

WTO 상소 기구 심리 추가 1~2년 예상

중간점검: 한일교착 상태 오래 같듯!

- 한국이 2019. 11.23 종료예정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및 일본수출규제에 대한 WTO제소절차 잠정 중단, 일보 후퇴?**
 - 당초 **지소미아 연기와 일본의 수출규제 철폐 맞교환** 계획을 양국수출관리 정책대화 진행을 전제로 양보.
 -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 **미국의 반대와 종용으로 후퇴**. 언제든 종료와 제소 재개 가능
 - 2019. 12. 20 일본 수출규제 중 '**포토리스트**'만 **특정포괄허가로 완화**
- 한중일 정상회담(베이징)시 한일정상간 현안 해결의 장 불발! **양국의 반일 반한 분위기 불변**. 외교적 해결 가능성 거의 全無!
 - 아베정부는 '한국측이 우선 문제 해결' 만 강조
 - 한국도 문희상의 징용공배상에 관한 '**1+1+알파**'(한일기업+민간성금, 간접적인 한일정부 보증)에 의한 재단(과거·화해·치유 재단?)설립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 우선**, 일본의 식민지배 불법성 인정, 사과 배상과 피해자의 수용 원칙 견지.
 - **가해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시기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우경화와 국내 반일프레임의 악순환에 의한 교착상태는 지속!
 - **해결책: 상대방을 무시한 대외전략은 더 이상 전략이 아님**. 存異求同 정신으로 ①사법권 자제 리더십, ②국민성금에 의한 징용공 피해 보상, ③식민지배 불법성 인정 일본중의원 결의 후 미래로!

일본수출규제에서 완화까지

2019년	
7월 1일	일본, 한국 거남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수출 규제 발표
8월 7일	일본,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
12일	한국,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일본 제외 발표
21일	중국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22일	청와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28일	일본,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시행
9월 11일	한국, WTO에 일본 수출 규제 제소
18일	한국,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일본 제외 시행
11월 22일	한국,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및 WTO 제소 절차 중지
23일	일본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12월 16일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20일	일본,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 일부 완화

(4) 전자 통신 장비, 정밀화학, 고급기계류 등 여타 실물과 금융분야로 규제 파급 차단

- 중재위 수용에도 불구하고, 합의까지 **기존 수출규제에 백색국가제외로 고급소재 규제 추가**, 양국간 무역 투자 기술교류도 축소경향. 하반기 성장률 전망 일제히 하향추세. 수출규제에 따른 반도체, 스마트폰, 대형 TV 등 주종수출 감소,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와 금융투자 급감, **자금유출 대비**.
- 정관계의 각종 경제보복 대책특별위원회는 총론에 그칠 뿐 수십년 이래의 천편일률적 방안 나열. 통폐합, 컨트롤 타워를 세워 기업과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의 묘. 특히 일본과의 **통화스왑** 추진. **현재 진행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 국제적 공론화'** 등 한국의 공세는 下手! 오히려 일본수산물 수입 단계적 허용 검토

(5) 실효성 있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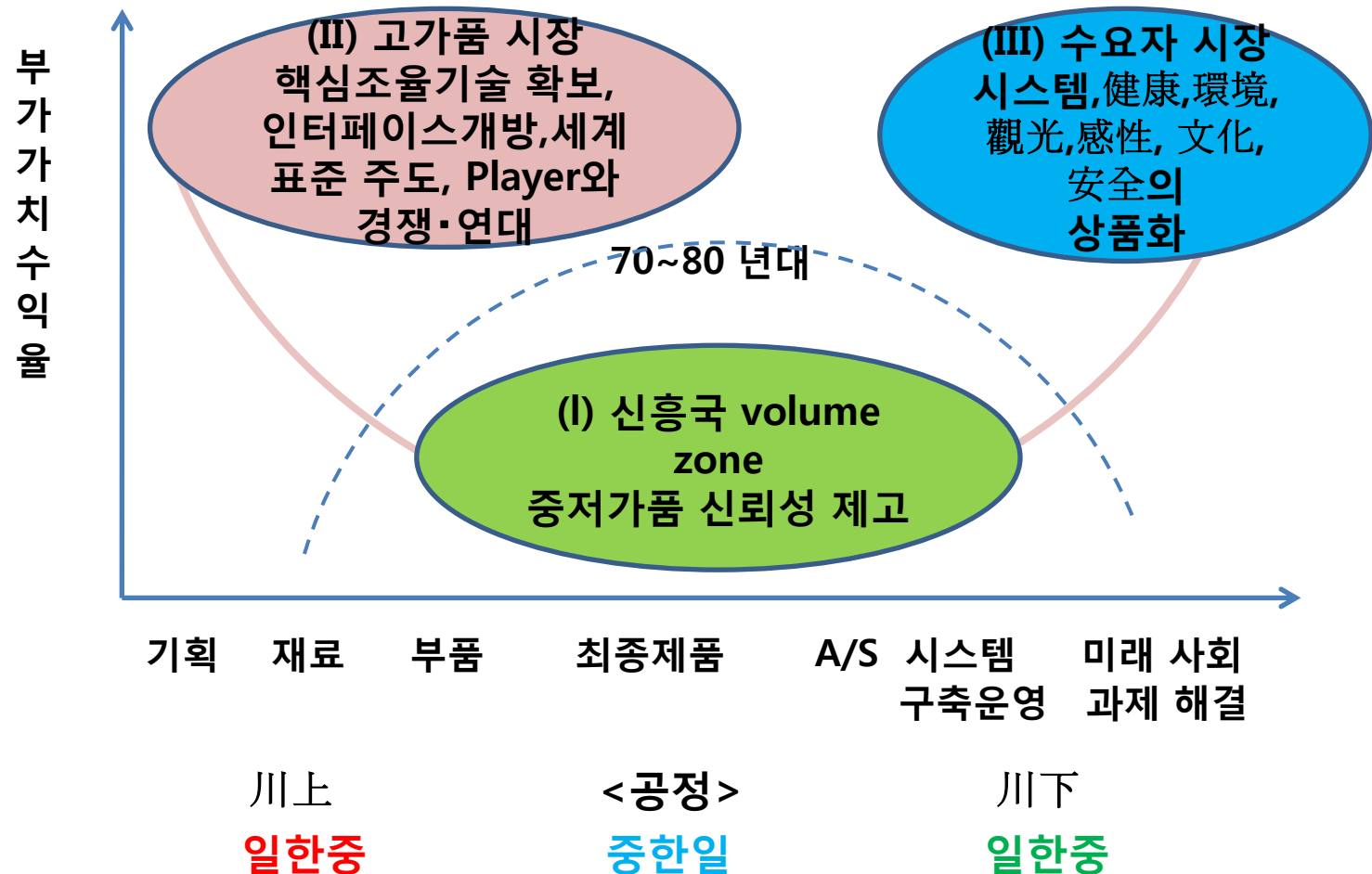
- 1978~1995년 **대일수입선다변화 제도(불공정행위로 비난)** 및 2차에 걸친 대일부품소재 국산화 5개년 계획을 통해 **중급 정도 부품소재 국산화 실현**
- 고급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해 **'2001년부터 소재부품 특별조치법으로 전문기업 육성'**, **2013년 '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 으로 2020년 까지 소재부품 수출규모를 6,500억 달러까지 확대 청사진 제시
- 그럼에도 2018년 현재 소재부품 수출액 3,162억 달러에 불과. **한국 11개 소재부품 분야 중 세계시장 경쟁우위 업종은 2017년 4개 불과(2010년 7개)**

- 아무리 원천기술이 확보된다 해도 상용화까지는 몇 번의 '**죽음 계곡**' 각오. **기업 자율 원칙고수. 대기업 총수만 불러서는 곤란**
- 대일의존도가 높은 핵심부품소재의 기초연구개발 인력 배가. 일본의 핵심부품소재는 이른바 **고도 숙련에서 잉태되는 암묵지(暗黙智)**의 결정체(특히 원료배합비율과 온도 차이에 민감한 화학물질). 제조업 스마트전략에 포함시켜 일본기업과 제휴 혹은 M&A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추진.
- 기술력은 수익력 확보를 위한 필요요건,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글로벌라이제이션과 4차산업혁명이라는 통상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고급기술+고가시장+브랜드력**으로 민간주도 수익모델, **히든챔피언(장인정신+자기혁신+노사협조)** 창출급선무
- 정부지원은 **특정업종 진흥에서 탈피**, 후발지역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한정. 범정부 차원의 연도별 목표 분명히 제시, 정권 부침에 상관없이 시대별 요구에 맞게 미세조정을 통한 지속적 체계적 지원.

(6)한일FTA 교섭 재개를 전제로 한 CPTTP(11)가입 교섭, 한중일FTA, RCEP 조기타결

- **人災쓰나미**는 한일共生네트워크 구축과 공공외교 활성화가 탈출구! 存異求同, 切磋琢磨 정신 절실. 과거와 현재와의 전쟁은 미래를 희생!
- **안보: 한미일 전략동맹, 경제: 한중일 광역공동체. 이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 급무!**

한중일 공정·사업별 연대 강화로 한중일광역공동체
- Smile Curve 상향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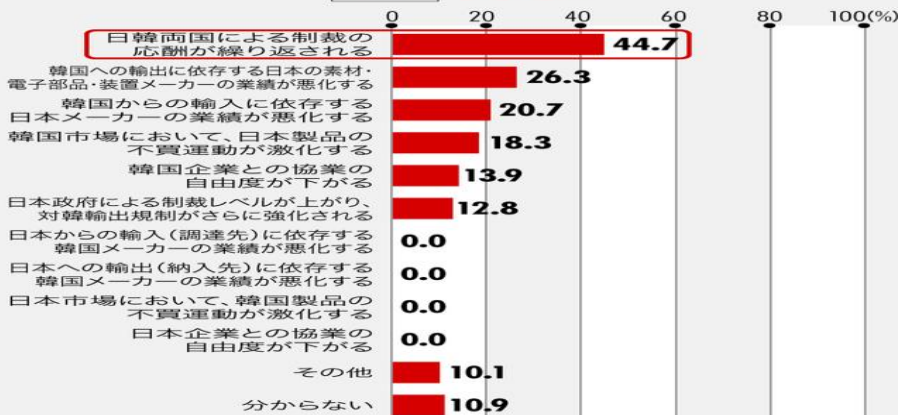
<비즈니스 우려사항>

일:보복전 반복, 대한수출업체피해, 수입업체 피해
한:보복전 반복,대일수입체 피해, 수출업체 피해,양국협업체제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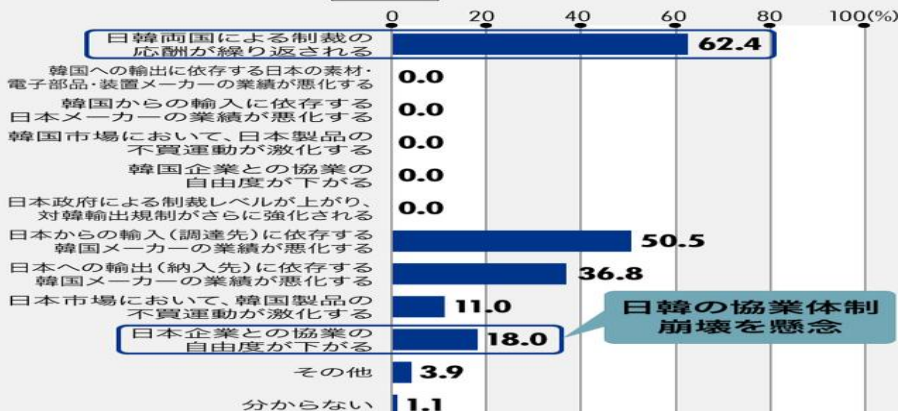
日韓共に制裁の応酬を警戒

Q11 日本・韓国とのビジネスで懸念しているのはどれですか(二つまで回答可)

● **日本**



● **韓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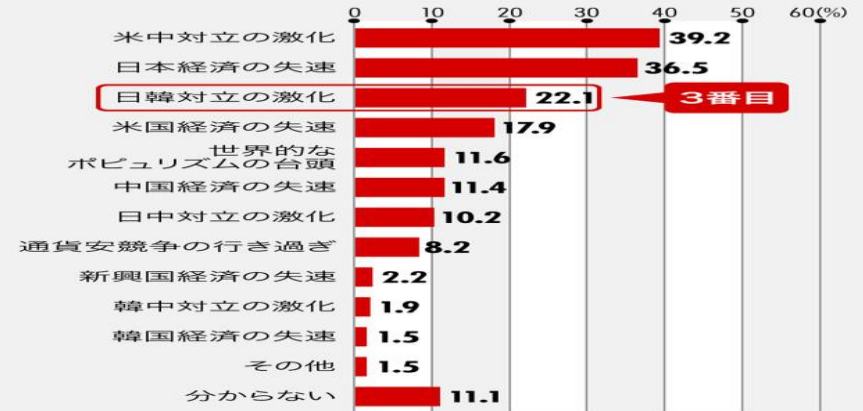
<거시경제 애로요인>

일: 미중대립, 일본경제침체, 한일대립 (22.1%)
한: 한일대립 (51.4%), 한국경제침체, 미중대립

日本で3番目、韓国で1番目の「日韓対立の激化」

Q12 ビジネスを遂行する上で懸念しているマクロ情勢はどれですか(二つまで回答可)

● **日本**



● **韓国**

